



청주 용성중학교(위)로부터 직선거리 50m에 설치된 CNG충전소(오른쪽). 이 충전소는 용성중이 들어서기 전에 설치됐다. 사진=시장경제DB

가스·수소충전소에 둘러 쌓인 청주 ‘용성中’ 안전성 논란

학교 담장 너머 CNG충전소·길건너 LPG충전소…내년 수소가스충전소 설치
“용성중, 작년 LPG가스는 부동의, 수소충전소는 동의 ‘고무줄 잣대’”
학교장 “의견수렴 이틀…시일 촉박 학운위원장 등에 전화로 동의받아”



용성중학교는 주변에 LPG·CNG·수소가스충전소로 둘러싸이게 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별간 원안은 기존 충전소, 녹색 원안은 내년에 건립되는 충전소. 사진=네이버맵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용성중학교(전교생 600명)가 주변에 LPG·CNG·수소가스충전소로 둘러싸이게 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용성중은 직선거리 50m, 학교 담장 사이에 시내버스 종점정류장에는 CNG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또한 8차선 길 건너편에는 일반주유소가 한 곳이 있으며 김수녕 양궁장 입구 위쪽에는 SK LPG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최근 청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8차선 건너편(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262)에 부지 1만9834㎡, 230kg 규모의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용성중은

그야말로 가스충전소로 둘러싸이는 형국이 된다. 김수녕 양궁장 위쪽 SK LPG 충전소와 학교 옆 CNG충전소는 학교상대정화구역이기는 하지만, 용성중이 들어서기 이전에 허가가 난 곳이다.

최근에 수소충전소 허가가 나면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너무 쉽게 학교 측이 수소충전소 허가 동의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곳 주민들의 불만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지난 5월 강릉수소뱅크 폭발사고 당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급부상한 수소경제에 비상이 걸렸던 것은 수소설비

의 가용할 폭발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용성중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소가스는 현존하는 가스 중 가장 가벼운 물질로 인화성이 매우 강해 아세틸렌 다음으로 폭발범위가 매우 넓고 수소 충전 차량용기의 압력은 최고 700배(70MPa)에 이른다.

◇ S가스 수소충전소 인가 ‘불허’ 고무줄 잣대

S가스는 지난해 상당구 용암동에 가스충전소 영업장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청주시에 신청했으나 시내와 가깝다고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S가스는 이에 앞서 지난해 용성중 8차선 건너편에 LPG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해 청주시에 인가를 신청했으나 용성중으로부터 학교상대정화구역이라는 이유로 동의를 받지 못해 가스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했다.

S가스의 한 관계자는 “LPG충전소에 비해 수소 충전소는 훨씬 위험한 데도 LPG가스충전소 인가와 관련해 용성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다. 수소가스충전소는 허가가 난 반면, 수소충전소보다 폭발성이 낮은 LPG충전소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 학교 측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는 “LPG 충전소 압력은 70~80MPa, CNG 충전소는 105MPa, 수소는 700Mpa로 훨씬 압력이 높다. 지난 5월에 발생한 강릉 M산업단지 수소뱅크 폭발사고 피해규모 어느 정도인지 보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수소충전소 인가’와 관련해 폭발위험이 훨씬 높은 수소충전소는 오히려 동의를 해주는 등 학교 측의 고무줄 잣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용성중 수소충전소 인가 과정 ‘논란’

청주 용성중 수소충전소의 의견서 수렴 과정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데다 학부모 회장 등 소수 인원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동의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논란의 발단은 수소충전소 인가와 관련해 청주시 상당구 용성중으로부터 수소충전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 2명에 게만 전화를 통해 통보하고 구두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곳은 학교상대보호구역으로 학교정문으로부터 약169.73m, 도시경계선에서는 103m에 위치해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다. 수소가스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성중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반드시 받아야 인가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결정과정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학교 측이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주시 상당구 용성동의 한 주민은 “수소충전소 허가를 내 준 것은 사전에 청주시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이 학부모

및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다”며 의견수렴 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 의견서 동의과정 단 ‘이틀’에 불과

나기출 용성중학교장은 “학교로부터 200m는 ‘학교상대보호구역’으로 신설되는 수소충전소는 학교정문으로부터 약 169.73m의 거리”라며 “도시경계선에서는 103m, 우리가 의견서를 낸 것은 학생들의 등·하교시 통학로 구분 및 접근 용이성 여부 등 모든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나 교장은 “당시 ‘학교장 지역위원회 출석희망 여부 및 의견서와 관련해, 수소충전소 건립 위치가 학교로부터 8차선 건너편에 있어 주 통학로가 아닌 데다 길 건너편의 주 출입구 및 대강건물이 보이지 않으며, 학생들의 접근성도 용이치 않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청주시교육지원청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문이 지난 5월 24일 도착했는데 28일까지 공문을 보내도록 돼 있는 데다 주말이 끼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13명)의 의견수렴 기간은 ‘이틀’에 불과했다. 게다가 수소충전소에 대한 위험성 등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짜여진 일정에 따라 서둘러 답변서를 작성해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황순태 용성중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 행정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수소충전소 설치할 위치가 학교에서 8차선 길 건너편이고 학교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닌 데다 친환경수소충전소가 국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구도

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상으로는 보지는 못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은 시간상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원을 신청받게 되면 행정절차를 밟아야하는데 15일내 통보해줘야 한다. 학교에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다. 위원회 심의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했다. 학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 위원회 심의가 결정된 것을 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수소충전소 인가·지원금은?

청주시 담당 공무원은 “수소충전소 부지가 선정됐고 부지 200평 규모에 디스플레이(충전기) 1곳이 설치되는데 내년 10월까지 30억 원을 들여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부지를 제공하고 충전소를 구축한다”면서 “수소충전소는 올해 사업 2곳을 대상으로 공모했지만 상대보호 구역에 해당돼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과 내수 등 청주지역에는 2곳의 수소충전소가 다음달까지 설치되고 내년에 1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차량은 올해 공모를 거쳐 100명(수소차 100대)에게 보조금(1대당 지원금 3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1대당 7000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원 기자